11 November 2026

ISSUE BRIEF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 Global Commerce Institute

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한미 통상 현안 전망

CONTACT



원장 **최석영**
T: 02.6386.6620
E: seokyoung.choi@leeko.com



고문 **임채민**
T: 02.6386.6630
E: chemin.rim@leeko.com



고문 **이태호**
T: 02.772.4396
E: taeho.lee@leeko.com



변호사 **박정현**
T: 02.6386.6649
E: junghyun.park@leeko.com



연구위원 **허난이**
T: 02.6386.6451
E: nyhur@leeko.com



연구원 **김사라**
T: 02.6386.6560
E: sara.kim@leeko.com

2026년 11월 3일(현지시각)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트럼프 2기 행정부 후반부는 이른바 '분점정부(Divided-Government)' 체제로 운영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유)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지난 11월 5일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美 중간선거 결과와 한미 통상관계 전망'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이번 중간선거 결과가 미국의 통상정책과 한미 통상관계에 미칠 영향을 논의했습니다. 패널들은 한국산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 대부분이 행정부 권한에 근거하고 있어, 의회 구성이 바뀌어도 관세 중심의 통상 기조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의회가 가진 조사권과 예산권으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수 있기에 기존의 한미 통상 현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우리 기업에 대한 영향으로, 대미 투자 이행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수 있으며 주 정부 차원의 정책 환경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이슈브리프는 금번 세미나 패널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한미 통상관계의 변화를 전망합니다.

1. 2026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와 의미

1) 공화당 텃밭을 넘어선 '블루 웨이브'

민주당은 상원에서 54석 이상을 확보해 다수당이 되는 것이 확실시되고, 하원에서도 250석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1] 특히 이번 중간선거 대상 상원 의석은 공화당 강세 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탈환 가능성은 낮게 평가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민주당이 예상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둔 요인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인상과 함께 올해 2월 발생한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상승 등으로 물가 안정에 실패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민주당이 내세운 '생활물가' 의제가 유권자의 지지를 얻었다. 둘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유권자층 일부가 해외 군사 개입에 반대하며 이탈했다. 셋째, 관세 부과와 무역 갈등으로 판로가 위축된 농업 지역에서 반발이 확대되었다. 넷째, 공화당은 2024년 대선과 유사한 선거 전략을 답습했으나 위와 같은 경제 현안이 부각된 상황에서 이는 유권자의 호응을 이끌어내기 어려웠다. 유권자 지형에서는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 지지 경향이 높았던 히스패닉 유권자와



연구원 김나경
T: 02.6386.6563
E: nakyeong.kim
@leeko.com

'美 중간선거 결과와 한미 통상관계 전망' 세미나 자료집

청년층이 다시 민주당 지지로 돌아섰으며, 그 영향은 특히 텍사스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

2) '분점정부' 의회의 권한과 한계

민주당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입법으로 뒤집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가 필요하고, 상원에서는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60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2] 따라서 의회의 실질적인 견제 수단은 하원의 예산권과 조사권, 그리고 상원의 고위 공직자 인준권이다. 예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연방정부 업무 일시 중단(shutdown)이 재연될 수 있고, 2027년 부채한도 협상에서도 대립이 예상된다. 특히 하원의 조사권은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기업이 투자 협상 과정에서 접촉한 행정부 고위 관료가 조사 대상이 되고 청문회에서 한국 관련 사안이 거론될 경우, 우리 기업이 의도치 않게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대통령과 의회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지만 양당 모두 2028년 대선을 의식해 전략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원의장으로 유력한 민주당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 의원이 당내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만큼, 백악관과 의회가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던 2006년 중간선거 이후 정국이 재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하상응 서강대 교수)

2. 중간선거 이후 미국 통상정책 전망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의 방향

중간선거 이후에도 통상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트럼프 2기 통상정책의 흐름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관세 무기화는 지속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으로 의회를 우회해 왔기 때문에 의회의 다수당이 바뀌어도 관세를 앞세운 양자적 압박을 이어갈 것이다. 둘째, 대중국 견제 기조는 초당적 지지 하에 이어질 것이다. 중국산 직접 수입 비중은 줄었지만 멕시코, 베트남, 한국 등을 거친 우회 수출이 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한국이 우회 수출 경로로 인식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 셋째, 앞으로 대미투자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안보와 산업정책은 양당의 지지를 얻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동맹국의 대미 투자를 '강요된 투자'로 보는 경향이 있어, 이러한 투자가 실제로 공급망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는지 엄격하게 검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의 주도로 빅테크 반독점 조사와 AI 규제를 강화하고, 전력요금과 용수 문제를 이유로 데이터센터 건립에 제동을 걸 수 있다. 반면 신재생에너지와 헬스케어에 대한 지원은 강화될 수 있다. (허윤 서강대 교수)

턴베리 체제의 지속

트럼프 행정부가 구축한 양자주의 글로벌 통상체제인 턴베리 체제(Turnberry System)[3]는 이번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WTO 체제에서는 관세혜택이 최혜국대우에 따른 회원국의 권리였지만, 턴베리 체제에서는 상대국이 미국에 반대급부를 주고 얻어내는 조건부 혜택으로 바뀌었다. 미국이 상대국의 합의 위반 여부를 스스로 판정하고 관세를 되돌리는 '스냅백(snapback) 장치'도 두었다.

의회가 이 체제를 바꾸기 어려운 이유는 세 가지다. 첫째, 관세 부과의 근거인 232조와 301조는 이미 의회가 법률로 행정부에 위임한 권한이다. 둘째, 의회가 대통령의 관세권한을 견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서기 어렵다. 셋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상대국과 맺은 합의는 모두 의회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협정이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문서 형태다. 2007년 민주당 의회가 '신통상정책'으로 한미 FTA에 노동과 환경 조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했고, 2019년 민주당 하원도

USMCA의 노동 집행 조항을 강화한 뒤에야 통과시켰듯이, 이번에도 의회는 정책 방향을 바꾸기보다는 수단과 속도를 조절하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태호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

3. 한미 통상 현안의 향방

한미 투자합의 이행

텍사스 가스복합화력 발전소는 투자가 확정되었고, 원전은 큰 틀에서 합의되었으며, 알래스카 LNG는 사업성을 검토하는[4] 단계이다.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투자합의는 10월 1일 첫 송금이 이루어지면서 점진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5] 원전은 양당이 모두 지지하는 만큼 가장 안정적인 사업으로 꼽힌다. 일반적으로, 만일 민주당 의회가 투자기금의 운용과 사업자 선정 과정을 점검하면, 오히려 투명성이 높아져 한국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셧다운, 연방 기관 인사의 인준 지연, 주 정부의 인허가 절차가 사업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텍사스 발전소 건설 사업은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데이터센터 건설이 늦어지면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으나,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직접 조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경우, 특정 데이터센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우리 사업에는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관세조치: 232조와 301조

232조 품목별 관세는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바이든 행정부까지 유지되었고, 미국 법원에서도 적법하다는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6] 철강은 2018년 쿼터제를 적용 받았으나 현재는 예외 없이 50%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고, 철강 파생상품에도 관세가 부과되어 기업의 부담이 크다. 자동차에는 15%, 일부 반도체와 파생제품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되고 있다. 최근 232조 조치에는 두 가지 특징이 관찰된다. 관세율을 곧바로 정하기보다 약 180일간 교역국과 협상하도록[7] 하고, 중국 견제 조치와 함께 발표된다는 점이다. 301조 역시 대중국 조치를 중심으로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다. 한국은 현재 강제노동 301조 조치에 따라 2026. 7. 24.부터 MFN 세율과 합산해 12.5%가 되는 관세를 적용 받고 있다(232조 적용 품목 제외).[8] 한국 포함 16개국을 대상으로 한 과잉생산 301조 조사는 아직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9] 301조 조사는 개시 후 1년 안에 결과를 발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년 3월경까지 발표 여부와 세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새 의회의 출범과 미중 휴전 시한이 겹치는 내년 1월이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10]

최근 50% 관세에도 대미 철강 수출이 늘면서 미국 철강업계에서는 쿼터제를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중간선거 결과를 고려하면 한국만을 겨냥한 쿼터 도입 같은 급격한 조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 철강 수출의 증가는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에 대한 수요와 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것인 만큼, 이를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다만, 과잉생산 관련 조사가 철강과 석유화학을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기업은 미국의 조치뿐 아니라 미국 · 멕시코 · 캐나다 무역협정(USMCA) 공동검토 및 EU 산업가속화법(IAA) 입법절차 등 기타 동향들도 함께 모니터링하며 공급망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조수정 고려대 교수)

디지털 통상 현안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는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명시된 '망 사용료'와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주요 쟁점이다.[11] 망 사용료는 EU가 턴베리 합의에서 도입을 포기한 만큼, 한국이 이를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12] 한편 온라인 플랫폼 규제는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통상 마찰로 이어지고 있다.[13] 그러나 한국은 EU와는 달리 미국에도 비견할 만한 경쟁력을 갖춘 국내 플랫폼 기업을 다수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입법 방향을 먼저 명확히 하고, 내국민대우 원칙에 따라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율한다는 점을 미국에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년 간 이어지고 있는 미국의 디지털 통상 압박 하에서 우리 정책상 필요성을 기준으로 명확한 입장을 정할 필요가 있다. (조수정 고려대 교수)

한미 통상협력의 과제

한미 통상협력은 실행 구조가 비대칭적이다. 한국이 약속한 경제안보 공조는 주로 국회의 입법과 정부의 집행으로 이행할 수

있으나,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정부의 허가, 의회 예산, 정부 조달, 민간의 결정을 모두 거쳐야 실현된다. 기업 차원에서도 양국 합의만으로 모든 리스크가 해소되지는 않는다. 예컨대 중국산 투입재를 한국에서 가공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같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법 체계마다 통관상 원산지, 한미 FTA 특혜원산지, 반덤핑 우회 판정, 수출통제와 제재는 각각 다른 기준으로 판단된다.

기술 분야에서는 협력과 통제가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양국은 2025년 10월 한미 기술번영 양해각서(TPD, Technology Prosperity Deal) MOU를 통해 AI 수출과 공동연구 협력에 합의했지만, 중국 공장에 장비를 반입하는 국내 반도체 기업은 미국 수출관리규정에 따라 여전히 연 단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조선 분야에서도 마스가(MASGA)로 협력의 기회는 마련되었으나,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려면 미국 법률상 해외 건조 예외와 정부 조달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한다. 민주당은 해외 건조 예외 확대에 소극적인 만큼 의회 동향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따라서 한미 통상협력에서는 추상적인 '상호성 원칙'에만 머물지 말고, 미국이 이행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인 실행 조건으로 정리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한편, 한미 FTA의 특혜관세는 사실상 무력화되었으나, 협정에 규정된 협의 절차는 여전히 활용할 여지가 있다. (박정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4. 기업의 리스크와 대응 방향

우리 기업은 다음 네 가지 측면에서 리스크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아래 네 가지 내용은 이번 세미나 토론을 통해 도출된 내용이다. <표 1>에서는 중간선거 이후 미국 통상정책 관련 주요 타임라인과 함께 우리 기업의 점검 사항을 정리하였다.

첫째, 대미 무역흑자와 우회 수출 논란에 대비해야 한다. 올해 10월 말 기준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1,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반도체 수출과 함께 50% 관세에도 대미 철강 수출은 늘고 있어 미국의 압박이 커질 수 있다. 미국은 에너지와 농산물 구매 확대, 추가 관세 부과, 미국 내 생산 확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기업은 수출 증가가 미국의 데이터센터 수요 등 실제 시장 수요에 따른 것임을 사실에 근거해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갖춰야 한다.

둘째, 연방 정부뿐 아니라 주 정부의 정책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한다. 환경과 노동 정책, 데이터센터 인허가는 주마다 기준이 다르다. 텍사스, 조지아, 미시간, 오하이오처럼 한국 기업의 투자가 집중된 지역에서도 이번 선거로 정치 지형이 크게 바뀌었다. AI 규제를 둘러싼 대립은 정당 간보다 연방과 주 사이에서 두드러진다. 주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동향도 예의주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미국 행정부와 연방 의회, 주정부와 주 의회, 그리고 관련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이고 입체적인 아웃리치 활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의회 조사에 대비해 투자 이행 과정을 문서로 관리해야 한다. 하원 조사 과정에서 투자 협상의 상대방이나 사업 구조가 청문회에서 거론될 수 있다. 따라서 계약 조건과 의사결정의 근거를 명확히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 의회 조사에서는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이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으므로, 내부 문서와 이메일이 공개될 수 있다는 전제로 작성하고 보존해야 한다.

넷째, 원산지와 수출통제 리스크를 사안별로 점검해야 한다. 같은 제품이라도 적용되는 법 체계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다르다. 원산지 서류뿐 아니라 부품과 공정, 거래상대방의 소유구조까지 확인해야 한다.

표 1 향후 미국 통상정책 관련 주요 일정

시기	일정	점검 사항
2027. 1. 3.	제120대 미국 의회 개회	하원 조사권 발동 방향과 예산 협상 동향을 살핀다.
2027. 1. 10.	미중 무역전쟁 휴전 연장 시한	대중국 301조 조치의 유예 연장 여부를 확인한다.
2027. 3. 1.	USTR '27무역정책 의제 및 '26 연례보고서 의회 제출 시한	한국 관련 통상 의제 및 투자 이행, 디지털 규제 등과 관련하여 규제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확인한다.

2027. 3. 11.	과잉생산 301조 조사 결과 발표 시한	철강과 석유화학 등 한국 주력 품목이 관세조치에 포함되는지 확인한다.
2027. 3. 31.	USTR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 (NTE Report) 발간 시한	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 한국의 비관세장벽 항목이 추가되거나 강조되는지 살핀다.
2027 상반기 중	의회 통상정책[14] 골격 제시 가능성	노동과 환경 기준, 대미 투자 검증 등 민주당의 요구가 한미 합의 이행 등 통상정책에 반영되는지 확인한다.
2027. 7. 1.	USMCA 연례 공동검토 시한	철강 원산지 기준, 비시장경제 제3국에 대한 대처 등 주요 규정이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살핀다.

1) 2026년 11월 9일 기준, 민주당 상원 54석, 하원 254석 확보. (상원 알래스카, 미시시피 2석은 미정.)

2) 작성 시점 기준 확보된 상원 민주당 의원은 54석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종결의 요건인 상원 의원 60명의 찬성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3) 2025년 7월 스코틀랜드 턴베리에서 이루어진 미국과 EU의 무역합의에서 유래한 명칭이다. 자세한 내용은 광장 국제통상연구원 이슈브리프 「국제통상질서 재편: 턴베리 체제와 통상 리스크」(2026. 6. 23.) 참조.

4) 1호 사업인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총사업비 약 223억 달러, 설비용량 약 6.5GW)는 투자가 확정되었고, 2호 사업인 대형 원전 8기 건설은 프레임워크 체결에 합의한 단계다. 연합뉴스, "가스발전·원전·알래스카…대미투자 어떤 내용 담겼나", 2026. 10. 1., https://www.fnnews.com/news/202610010607450693; 한국경제, "한미 전략투자 팩트시트 발표…대형 원전 8기 프레임워크 합의", 2026. 10. 1.,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610016765Y.

5) 2026년 10월 1일 한미 양국 정부는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정부는 같은 날 1호 사업인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에 24억 달러를 송금했다. 뉴시스, "대미투자 첫 24억弗 송금…韓은 일정대로, 美 발표가 늦었다", 2026. 10. 3., https://newsis.com/view/NISX20260922_0003801097.

6) Americ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eel v. United States, 966 F.3d 1338 (Fed. Cir. 2020), cert. denied.

7) 2026년 1월 14일 핵심광물 포고(Proclamation 11001)와 2026년 10월 22일 풍력터빈 포고(Proclamation 11074)는 즉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무부와 USTR이 교역국과 협상한 뒤 18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경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White & Case, "President Trump orders critical minerals trade negotiations in Section 232 action", 2026. 1., https://www.whitecase.com/insight-alert/president-trump-orders-critical-minerals-trade-negotiations-section-232-action.

8) USTR, "USTR Takes Action in Forced Labor Section 301 Investigations", 2026. 7. 23., https://ustr.gov/about/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6/july/ustr-takes-action-forced-labor-section-301-investigations.

9) Federal Register, "Initiation of Section 301 Investigations: Acts, Policies, and Practices of Certain Economies Relating to 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 Sectors", 2026. 3. 17.,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3/17/2026-05214/initiation-of-section-301-investigations-acts-policies-and-practices-of-certain-economies-relating.

10) 제120대 미국 의회는 수정헌법 제20조에 따라 2027년 1월 3일 개원한다. 미중은 2026년 9월 협의에서 11월 10일 종료 예정이던 무역 휴전을 2027년 1월 10일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美재무 '미중 무역휴전 2개월 연장 합의…내년 1월10일까지'(종합)", 2026. 9. 23., https://www.koreadaily.com/article/20260923181725146.

11) The White House, "Joint Fact Sheet on President Donald J. Trump's Meeting with President Lee Jae Myung", 2025. 11. 13.,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11/joint-fact-sheet-on-president-donald-j-trumps-meeting-with-president-lee-jae-myung/.

12) European Union, "Joint Statement on a United States-European Union framework on an agreement on reciprocal, fair and balanced trade", 2025. 8. 21., https://policy.trade.ec.europa.eu/news/joint-statement-united-states-european-union-framework-agreement-reciprocal-fair-and-balanced-trade-2025-08-21_en.

13) The Korea Times, "Trade feud with US reignited over Korea's online platform regulations", 2025. 12. 21., https://www.koreatimes.co.kr/business/companies/20251221/trade-feud-with-us-reignited-over-koreas-online-platform-regulations.

14) 2006년 중간선거에서 양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2007년 5월 10일,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이른바 '신통상정책(New Trade Policy)'에 합의했다. 당시 미국의 신통상정책은 당시 공화당 행정부가 외국과 통상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대국에게 요구할 기준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과 환경 조항이 강화되었고, 타결(2007. 4. 2.) 직후 서명을 앞두고 있던 한미 FTA에도 추가협상을 거쳐 이 조항들이 반영되었다. 이번에도 민주당 의회가 상반기 중 자체 통상정책의 골격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동향을 주시해야 한다.



개 요

일　　시 2026년 11월 5일(목) 14:15 ~ 17:00

장　　소 서울 강남구 코엑스(COEX) 327호

운영 방식 패널 발제,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주　　최 한국무역협회, 법무법인(유) 광장

프로그램

시간		세부 내용	발표자
14:15 - 14:30	15'	개회 및 인사말	
14:30 - 15:40	70'	세션1. 2026 미 중간선거와 글로벌 통상질서	
		중간선거 결과 평가와 함의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트럼프 임기 후반의 대외정책 전망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
		턴베리 체제의 현황과 전망	이태호 법무법인(유) 광장 고문
		Q&A	좌장 : 최석영 법무법인(유) 광장 원장
15:40 - 15:50	10'	커피 브레이크	
15:50 - 17:00	70'	세션2. 한미 통상 현안과 도전 과제	
		한미 투자합의 이행 현황과 전망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통상연구원장
		한미 통상현안 현황과 전망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미 통상협력의 새로운 과제 (비관세장벽, 경제안보, 한미 FTA)	박정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Q&A	좌장 : 박태호 서울대 명예교수

*세부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문의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ds.kim@kita.or.kr, 02-6000-5071)

지난 이슈브리프 더보기

- 중국의 경제안보 법제와 기업의 대응 방향 (2026. 11. 3.)
- 한국의 CPTPP 가입 추진(I): 배경, 기회와 도전요인들 (2026. 10. 2.)
- EU 배터리 규정 최근 동향과 대응 과제: 배터리 여권과 기업 리스크 점검 (2026. 9. 15.)
- EU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동향과 한국 산업별 영향 검토 (2026. 8. 31.)
- Trump 관세의 실체: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과 한계 (2026. 7. 27.)
- 주요국의 외국인투자심사제도 강화 동향: 특징, 리스크 및 대응방향 (2026. 7. 22.)
- AI · 사이버 전장의 시대, 한미 방산협력의 새 길 (2026. 7. 16.)
- 국제통상질서 재편: 「턴베리 체제」와 통상 리스크 - 미국의 양자 무역합의 확산과 도전 (2026. 6. 23.)
- 미 · 중 정상회담 결과: '전략적 안정' 합의와 통상 · 투자 위원회 설치 (2026. 5. 27.)
- 2026 베트남 대전환: 신지도부 경제전략과 우리 기업의 대응 방향 (2026. 5. 14.)
- 2026년 미국의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 (2026. 4. 8.)
-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와 그 함의 (2026. 4. 3.)
- EU 산업가속화법안의 주요 내용과 국내 산업계 시사점 (2026. 3. 18.)
- 미 국제무역법원(CIT), IEEPA 관세 전면적 환급 명령 (속보) (2026. 3. 11.)
- 상호관세 등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 (속보) (2026. 2. 23.)
- 미국의 양자 무역 · 투자 합의 분석과 전망 (2026. 2. 11.)
- 한 · 미간 조선 · 해운 협력과 도전과제 (2026. 1. 14.)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원장: 최석영)은 글로벌 경제안보의 급부상과 무역 체제의 변화 등 새로운 국제통상 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광장」이 설립한 연구기관입니다. 기업 경영 및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통상 · 경제안보 이슈를 면밀히 분석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소통하고 공유하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 발전하고자 합니다.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에 있으며, 무단 복제 및 도용을 금합니다.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법무법인(유)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뉴스레터 더 보기

Lee & Ko 법무법인(유) 광장

서울 | 서초, 서울 | 판교 | 북경 | 호치민시티 | 하노이 | 자카르타

02.772.4000 | mail@leeko.com | www.leeko.com